

‘미리 살아보고 귀농·귀촌’ 함평에 체류형 지원센터 문열었다

예비 귀농·귀촌인 3~10개월 간 거주
 기초농업·전문실습·농촌문화 등 체험

전남도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함평군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가 9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이상의 함평군수, 양동철 전국 귀농귀촌중앙회 회장, 입주자(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3~10개월 간 가족과 함께 체류하면서 기초농업, 전문실습, 농촌문화 등 이론과 실습 교육을 받는 공간이다.

2019년 전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함평군은 3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만5385㎡에 입주자 숙소 원룸식 기숙형 1동(12실), 단독주택(가족형) 9동, 시설하우스 3동을 건립했다.

텃밭, 버섯 재배사, 농기계보관소, 교육장, 회의실, 독서실, 휴게실, 체력단련실을 갖췄다.

센터의 한 달 이용료는 숙소 형태에 따라 기숙사형(8평) 15만원, 단독주택형(11평) 20만원

김영록 전남지사과 이상의 함평군수 등이 9일 오후 전남 함평군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에서 개소식을 갖고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함평군 제공)

이다. 쾌적한 최신 시설에 교육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어서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체류형 귀농산어촌 지원센터는 귀농·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했다”며 “예비 귀농·귀촌인이 교육 수료 후 영농에 실질적 도움을 받도록 기본적인 작물 재배기술부터 농업·창업 경영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전남에서는 현재 함평, 구례, 고흥, 강진(2), 영암에서 체류형 지원센터 6곳을 운영하고 있다.

함평=김광준기자



담양군, 친환경 미생물센터 준공

축사 악취로 주민 생활권 침해·갈등문제 해결...특허 미생물 공급 개시



담양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미생물센터를 신축했다. (사진=담양군 제공)

담양군이 축사 악취로 인한 주민 생활권 침해와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25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 미생물센터를 신축했다.

이 센터는 1층에 미생물배양실과 저온저장고, 사무실, 2층에는 종균실험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조사료분석실을 갖추고 있다. 또 멸균배양기 7대 등 배양시스템을 확대

구축해 이달 중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친환경 미생물센터에서 생산·공급하는 미생물은 모두 7종(광합성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슈도모나스, 클로렐라, BT균)으로 마을 인접 축산 농가는 악취 저감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 지역 농업인은 병충해 방제와 가축 면역력 증강, 작물생육 증진 등을 위한 친환경 미생물 7종을 10 기준 3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아울러 배양시스템 확대 구축과 함께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악취 저감 미생물도 새롭게 공급할 예정이다. 특허균주는 축사 내 악취 유발물질인 암모니아(65%)와 황화수소(42%)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철규 소장은 9일 “악취 저감 미생물과 친환경 미생물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배양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쾌적한 생활권 보장과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文 대선 광주공약 5·18 헌법 전문-군공항 이전 ‘지지부진’

5·18 헌법 전문 수록, 야당 반대로 임기 내내 공전
 군공항 이전, 정부 뒷짐-광주·전남 갈등에 제자리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4년 전 대통령선거 당시 약속했던 광주 공약 중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군(軍) 공항 관련 사업들이 임기 말까지 이렇다할 진척이 없어 공약(空約)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회 문턱과 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각각 발목이 잡혀 차기 정부로 넘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발표된 문 대통령의 광주공약은 3개 분야에 걸쳐 12개 공약 22개 세부사업에 이른다.

세부사업 가운데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철도) 건설 등 18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는 반면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수룩과 군공항 이전사업 국가지원, 군공항 종전부지 스마트시티 조성 등은 임기 내내 야당의 반대와 광주·전남 시·갈등은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5·18 기념식에서 밝힌 5·18 관련 3대 약속 중 하나이기도 한 5·18 광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각계 서명운동과

정부의 개런안 발의, 대통령이 사과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거센 반발과 개헌에 따른 부담으로 진척없이 공전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개헌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기도 했지만 헌법 전문 수록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자, 국정의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군공항 관련 공약들도 이에 당사자인 광주와 전남 두 광역단체 간의 뚜렷한 이견과 평행선 갈등이 수 년째 이어지면서 한 치의 진척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민간공항 이전 논란까지 맞물려 뒷말과 잠음만 무성하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하는 4차 실무협의체가 꾸려지면서 한 가닥 희망이 일기도 했으나, 근본적인 이견으로 다자 간 협의는 벽에 부딪힌 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군공항 이전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군공항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 논의도 울스톱 상태다. 코로나19라는 거대 약재까지 겹치면서 개발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공항 이전

이 늪에 빠지는 바람에 종전부지 도시건설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선정, 합의각서 체결 등도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 상생공약 중 하나인 한전공대(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부지 확정으로 분개도에 오르긴 했으나, 첫 신입생 모집과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를 맴돌면서 더딘 진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20대 대통령선거를 1년 앞두고 이날 대선 공약 기획 방향 설명회를 열고 대선공약 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시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발굴한 공약 과제를 한데 모아 대선공약 기획보고서 초안을 4월까지 마련한 뒤 차기 국정 운영방향에 적합한 대형 과제로 다듬고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6개 추진단을 운영해 사업화 단계와 시민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7월까지 공약과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용섭 시장은 앞서 이날 오전 화요간부회의에서 “내년 대선을 광주미래 도약과 현안 해결을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발전에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공약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홍희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